

지방선거 '정책' 실종 '정치 공방' 난무

광주시장, 현안 산적한데 당원명부 유출의혹 법정공방까지
전남지사, 민주당 교통정리 안 돼 정책선거 찾아볼 수 없어
기초단체장·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문심 마케팅'에만 몰두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선거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광주·무안공항 통합, 한전공대 설립, 광주역 활성화 방안 등 풀어야 할 지역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는 없고 후보 간 공방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은 정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문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 토론과 선의의 경쟁 대신 당원 간 고소·고발로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등 지방선거 분위기가 정책 대결이 아닌 '정치 싸움'으로 치달고 있다.

이에 광주지역 원로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지역민을 위한 정책 선거를 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13일 지역선거에 따르면 최근 한 방송국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등장한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등 3명의 후보가 붙었다.

현재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는 7명의 후보 중 강기정 전 국회의원, 최영호 전 남구 청장,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이병훈 전 광

주 농장을 지역위원장 등 4명만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예초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격려 발언'으로 후보 간 공방을 촉발한 이 전 부위원장은 정치적 공방 대신 정책 선거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인 정책토론회에 불참해 또 다시 일부 후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경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고,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만한 정책과 후보들의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회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불참한 윤 시장과 이 전 부위원장, 양 최고위원의 경우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광주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난과 이 전 부위원장을 둘러싼 당원 명부 유출 공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최근 몇몇 시장 후보군들은 정책 선거를 표방하며 본인들의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에 따른 후폭풍에 가려 이들 공약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무일 "공수처 도입, 위험요소 빼야" 발언 파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과 관련해 위험적 요소를 제거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험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정부 명의의 공수처 법안을 낸 법무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위험 문제를 문 총장이 거론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두고 국회나 정부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뜬금없이 '위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론적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랑게...빨강게...하얗게...봄이 왔어요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한 화훼농장에서 관계자들이 화려하게 피어난 펜지 등 봄꽃을 화분에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표 개헌안 21일 발의

"차기부터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함께 갈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는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방선거 투표일을 역산했을 때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

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오늘 피의자 소환

오전 9시 30분 포토라인에 ... 검찰, 1회에 모든 조사 마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 혐의 등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이 전 대통령 조사에 검찰은 이 수사를 담당했던 첨단범죄수사1부, 특수2부 부장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진행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수수과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전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한 입장을 발표한 뒤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첨단범죄수사1부 1부 신봉수 부장과 특수2부 송경호 부장, 이복현 부부장이 투입된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수사, 특수2부는 뇌물죄 관련 수사를 해온 부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도 이뤄진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이날 1회만으로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누가 뛰나-무안군수 ▶5면

신학기, 스쿨존이 위험하다 ▶6면

KIA, 시범경기 두산에 역전승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할 먹거리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여·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장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양식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장거미 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터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인생화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원다리새우 2.2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여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창업, 이제 같이 고민합시다. 후배님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F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